



|  |                  |  |  |
|--|------------------|--|--|
|  <b>국토교통부</b> | <h1>보 도 자 료</h1> |  |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<br><b>하나된 열정<br/>하나된 대한민국</b>  |
|  | 배포일시             | 2017. 11. 24.(금)<br>총 2매   |  |
| <b>담당<br/>부서</b>   | 국토정책과            | <b>담당자</b>   | • 과장 김규철, 사무관 최수관, 주무관 문병철<br>• ☎ (044) 201-3647, 3648   |
|  | 토지정책과            | <b>담당자</b>   | • 과장 김상석, 사무관 현지수, 주무관 이충수<br>• ☎ (044) 201- 3401, 3406  |
| <b>보 도 일 시</b>   |                  | 2017년 11월 27일(월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<br>※ 통신·방송·인터넷은 11. 26.(일) 11:00 이후 보도 가능 |  |

## 한·일, 국토계획·토지정책 협력 머리 맞댄다

### 분과별 회의와 함께 평창올림픽 경기장·더 스마트움 등 현장 시찰 진행

- 국토교통부(장관 김현미)는 27일(월)부터 4일간 서울 양재동 더 케이 호텔에서 ‘제21회 한·일 국토/토지분야 협력회의’를 개최한다. 이번 회의를 통해 양국 간 국토계획 및 토지정책 분야 협력이 더욱 공고해질 것으로 전망된다.
  - 한국 측에서는 국토교통부 안충환 국토정책관을 수석대표로 12명의 대표단이 참여하고, 일본 측은 국토교통성 오하라 노보루 대신관방 심의관 등 9명이 참석한다.
- 이번 회의는 전체회의와 분과(국토분과, 토지분과) 회의로 나뉘어 진행되고 현장 시찰도 병행될 예정이다.
  - 첫째 날 전체회의에서는 우리나라가 새 정부의 국토균형 발전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해 발표하고, 일본 측은 제2차 국토형성계획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.
  - 둘째 날 분과회의에서는 양국의 지역개발사업과 광역연계 프로젝트 현황, 부동산 전자거래시스템 등에 대해 발표와 논의를 이어간다.

**<주요 의제>**



| 구분   | 일 본                       | 한 국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전체회의 | 제2차 국토형성계획 주요 내용          | 국토균형발전 정책 추진방향               |
| 국토분과 | 광역연계프로젝트 관련 사항            | 지역개발사업(투자선도지구 등)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|
| 토지분과 | 부동산 전자거래시스템 구축 현황 및 향후 계획 |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구축 운영          |

- 아울러, 일본 대표단은 스마트시티와 스마트 홈 체험 등이 가능한 **더 스마트움\***, 원주 기업·혁신도시 현장을 방문하고, 내년 3월부터 축제의 장이 펼쳐질 **평창 동계올림픽 경기장도** 둘러볼 예정이다.

\* 서울 강남구 자곡동에 소재하며, 기존 한국토지주택공사(LH) 주택홍보관(기존 “더그린관”)을 **스마트시티(도시개발, 교통·에너지 등) 및 스마트홈 기술 체험**을 할 수 있도록 새롭게 단장한 **홍보관**

- **한·일 국토/토지 분야 협력 회의는 1993년 양해각서 체결 이후** 우리나라와 일본에서 **매년 교대로 개최**하고 있으며, 그동안 양국 간 정책정보 교환 및 상호 협력 증진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.

- 수석대표인 **안충환 국토정책관**은 “이번 협력 회의는 양국 간 국토 정책 방향과 사례를 공유하고 심도 있게 논의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다.”라며 “앞으로도 양국의 국토·토지분야 정책 발전과 상호 협력이 더 구체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.”고 밝혔다.

|  |   |
|--|---|
|   <p>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</p> | <p>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국토정책과 최수관 사무관(☎ 044-201-3647)이나 토지정책과 현지수 사무관(☎ 044-201-3401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</p> |
|--|---|